

광주 동구 상습투기지역, '향기나는정원'으로 탈바꿈

동명동 원룸골목 국화·향나무 등 식재 골목정원 조성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로 청소행정혁신사업 지속 추진"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구 만들기'를 위해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지역에 향나무 등을 식재해 '향기나는 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최근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동명동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동명동 행복동거단, 마을환경관리사, 원룸촌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기나는 따뜻한 골목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골목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명동 원룸골목에 슬래잡기 벽화 그림을 그리고, 국화와 메리골드, 향나무 등을 식재해 색다른 쓰레기 문제해결 접근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골목정원을 조성했다. 조성된 골목정원은 동명동 주민자치회와 주민들로 구성된 '행복동거단(보행자가 행복한 동명동거리 만들기 추진단)

임)이 골목정원사가 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동명동 원룸골목은 그동안 상습적인 무단투기로 인한 불법쓰레기가 매일 1톤 가까이 발생해 환경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동구는 민선7기 들어 민관 협력으로 '2020 청소행정혁신사업'을 추진하며 골목정원 조성 등 다양한 청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골목정원 조성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은 물론 골목과 이웃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ghszk@hanmail.net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구 만들기'를 위해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지역에 향나무 등을 식재해 '향기나는 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 제공

광주시, 도시계획관리지역 지정 '과잉 규제' 논란

빛그린산단 인근 주민생활 교통 환경 등 이유로 수년째 갈등
 민원인, 농업용 창고는 허용...물류창고 시설은 '불허' 불합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도시 외곽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도시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자연환경 등을 이유로 농·임·축산업 등 용도의 창고시설은 허용하는 반면 물류창고 등 시설은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뿐더러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광주시 도시계획관리 조례에는 창고시설 건축을 제

한하고 농·임·축산·수산업용 창고시설은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 또는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 때문에 민원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광산구 소재 빛그린산단 인근 도시계획관리지역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수년째 광주시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소재 도시계획관리지역의 창고시설 건축제한과 농·임·축산·수산업용 허용한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창고시설 제한을 받는 이 지역

인근에 빛그린산단이 조성 중인데다 인접한 평동산단 등 다른 산단과의 연계 접근성이 용이해 물류 유통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자치구의 관리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은 농촌지역에서도 제외돼 농촌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도시계획관리 지정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아닌 오히려 역차별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외된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대전시를 제외한 인천, 대구, 울산, 부산, 세종시 등은 이 규정이 없어 모든 창고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는 도시계획관리지역 면적이 미미해 물류창고 수요나 배후도시로의 개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광주시에만 과도한 규제로 묶어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물류창고 시설 건축을 요청한 지역은 마을이 있어 취락지구로 주변의 환경보호등을 위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연마을 주변에 제조업소, 자원순환시설, 창고시설 등이 들어서면 교통환경 등 주거생활의 불편이 초래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통 환경 등 민원 발생을 우려해 물류창고 시설 등은 빛그린산단으로 입주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 관계자는 "중·소규모의 물류창고가 조성되면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분진, 소음, 교통문제 등이 우려된다"면서 "빛그린국가산단 주변은 장성과 함평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창고시설이 난립할 경우 진입경관과 가로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승현 기자

전남도, 내년 귀농촌 지원사업 국비 '전국 최다' 국비 28억 확보...귀농·촌 활성화 기반 다져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의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공모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억 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초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될 사업이다. 농촌이 주를 희망한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 정보제공,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는 6개월간 농촌에서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미리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최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귀농·귀촌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

측돼, 전라남도는 이 사업이 농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 해소, 농업·농촌의 활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전라남도는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사업에 67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규 농업 인력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정책실장은 "농업의 가능성과 전남 농촌의 미래에 장에 매료돼 매년 4만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들어오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유치지원정책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를 창립한 김경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장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언론환경은 우리 기자들에게 멀티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보혁명의 선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채널 다매체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된 반면 기존매체와 뉴미디어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시대의 언론과 언론인에게도 변화지 않는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정론직필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제공입니다. 기자는 진실과 정의를 통해 시대를 깨우치고 이끌어가는데 신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를 새롭게 창립한 이유도 바로 이런 구심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전기협'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합한 언론상을 확립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을 가지고 그 사명과 소임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균형을 잡고 사회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언론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선배 언론인들이 불의나 부당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오셨듯이 우리들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바르고 진실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내빈석
 김경